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 필요

이영소장

최근 개방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는 2010년 113만 9,283명에서 2011년 126만 5,0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후기자본주의의 극심한 경쟁구조 속에서 노동이주하였거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우려한 국제결혼지원정책에 의하여 이주한 사람들이다. 지구촌 대부분의 다문화 공간이 그러하듯, 이주민들은 본국민에 비하여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 공간 속 인종과 문화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온 서양의 국가들도 여전히 인종 간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일민족의 전통이 강조되어온 우리 사회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난 예가 바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이자스민씨에 대한 인터넷 공격과 수원 조선족 살인사건으로 인한 외국인 혐오 현상이다. 막연한 불안과 혐오, 분노의 감정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진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세계시민 의식을 현대인의 미덕으로 여기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짧은 기간의 변화로 인해 체계적인 준비 없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적 의지 혹은 국제적 환경에 의해서 앞으로 더 큰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범정부적 대책은 필수적이다. 다문화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한 우리나라의 중



요한 미래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01개나 운영되고 있는 등 단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외국인이 주자의 인권향상보다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에만 지원이 집중된 아쉬움도 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다각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권익신장을 우선하는 포괄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에 국한되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우리가 감싸줘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동등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로의 빠른 통화보다는 그들이 전해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의식교육은 취학 전 영유아기부터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따라서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편견 교육과 지원에 대한 섬세한 정책이 요구된다.